

##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손호철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국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한국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두 사건인 1987년 6월항쟁과 2016-17년 촛불혁명(11월촛불혁명)을 그 원인, 주체, 규모, 투쟁방식, 투쟁목표, 결과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두 사건들을 또 다른 중요한 민주화운동인 60년 4.19혁명, 그리고 80년 5.18광주민중항쟁과 비교한 뒤 이번 촛불은 5.18이나 6월항쟁과 달리 단순한 항쟁이 아니라 미완의 현재진행형의 혁명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주제어 | 6월항쟁, 11월촛불혁명, 4.19혁명, 5.18민중항쟁

## 1. 들어가며<sup>1)</sup>

올해로 역사적인 6월항쟁이 30주년을 맞았다. “빨갱이 타도”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자유들은 87년에 일어난 바로 이 6월항쟁에 빚지고 있다. 사실 우리의 현대사는 6월항쟁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화이전 시기’와 ‘민주화이후 시기’로 나누어진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역사적인 또 한 번의 항쟁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최초의 현대대통령의 탄핵과 박정희체제의 ‘뒤늦은 종말’을 가져온 ‘11월시민혁명’ 내지 ‘11월촛불혁명’이다(나는 이번 항쟁에 대해 초기에는 ‘광화문항쟁’이라고 불렀지만 ‘11월시민혁명’이 올바른 용어라고 생각한다. 우선 광화문이 중심지이지만 87년 6월항쟁처럼 전국적 항쟁이라는 점에서 ‘11월항쟁’이 더 적합한 표현이며 시민들이 단순한 박근혜퇴진을 넘어 헬조선 탈피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항쟁보다는 ‘시민혁명’

---

1)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6월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민주주의’(2017년 6월 7일)에서 발표한 “6월항쟁과 11월 촛불혁명: 반복과 차이”를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나는 기념사업회로부터 이 글의 청탁을 받고 취지에 공감해 쓰고 싶었지만 끝까지 망설였다. 그것은 김영란법 때문이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김영란법은 교수들에게 모든 외부강의, 기고, 학회 발표, 토론 등 외부학술활동을 사전보고하거나 사후 이틀 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다(김영란법 시행 6개월 동안 범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의 74%가 이 같은 외부강의 등 신고불이행과 늦장 신고였다). 물론 고액강의 등 특혜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신고 때 국세청에 다 보고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하면 규정이상의 고액강의 등만 보고하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 학술활동을 보고하게 한 것은 학자들의 모든 지적 활동을 국가가 보고받고 통제하려는 반학문적이고, 반헌법적인 ‘1984년’의 현실화이다(사실 이 규정이 가진 장점은 국정원이 이 같은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없어져 국정원 예산을 줄여도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쓸 경우 ‘1984년’식 악법에 내 자신이 순응해 이 발표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내 양심에 따라 보고를 거부하고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적 범법자’가 되는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법을 반인권적 악법으로 고발하기로 결심하고(이미 고발했다) 이 글을 쓰기로 수락했다.

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2)</sup>). 주목할 것은 박근혜 게이트와 ‘11월촛불혁명’이 일어난 시점이다. 이 혁명이 기이하게도 1987년 6월항쟁 30년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바라보는 사회과학자의 심정은 양면적이다. 우리의 시민이, 사회운동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아니 더욱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쁘다. 그러나 동시에 6월항쟁이 30년이나 지나서도 유신시대나 있을법한 블랙리스트가 우리를 옥죄어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동안 정치권은, 언론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몇 달간 거리로 뛰어나와야 했다는 사실이 슬프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11월촛불혁명과 6월항쟁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

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군사독재를 끝낸 6월항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을 탄핵해 권좌에서 몰아내고 감옥으로 보낸 11월 시민혁명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이 두 위대한 투쟁을 1) 원인 내지 배경, 2) 주체, 3) 목표, 4) 투쟁방식, 5)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

2) 투쟁이 11월을 넘어 12월로 이어져 ‘2016년시민혁명’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2017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항쟁이 본격화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너무 길어서 그렇지, 정확한 이름은 ‘2016-17년 촛불혁명’일 것이다). 이번 항쟁에 대해 11월시민혁명이 아니라 광화문항쟁이라고 부른 나의 초기의 글은 “광화문항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6. 11. 16. 이후 11월시민혁명으로 보고 분석한 책은 (손호철 2017)로 이 글의 11월촛불혁명 부분은 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 가. 배경(원인)

87년 6월항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다. 박정희는 72년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그전까지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변단체가 선출하도록 만들었다(한홍구 2014). 소위 ‘체육관 대통령선거’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박정희가 암살당한 뒤에도 전두환은 80년 봄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피의 학살로 진압하고 이 같은 반민주적 제도를 계승했다. 87년 전두환의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 야당과 민주시민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출권을 요구하며 정부와 충돌했다. 한마디로, 87년 6월항쟁은 야당과 민주시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전두환정권과 군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학술단체협의회 1997; 서중석 2011).<sup>3)</sup>

그러면 유례없는 촛불혁명, 즉 ‘11월시민혁명’은 왜 일어난 것인가? 표면적으로 그 원인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이트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고 87년 6월항쟁과 달리 그 이유는 보다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시간을 ‘단기지속’, ‘중기지속’, ‘장기지속’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사건사’, ‘복합국면사’, ‘구조사’로 이론화한 한 역사학자의 분석이다(Braudel 1971, 11-42).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촛불혁명에도 비슷한 세 층위가 작동하고 있다(손호철 2017, 22-23). 물론 가장 표층인 ‘사건사’적인 면에는 박근혜계이트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계이트역시 단순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측근비리로 치부할 수 없다. 박근혜는 ‘박정희신화’ 덕으로 대통령에 올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로부터 재벌과의 유착, 공작정치, 공권력의 사유화 등이 보여주듯이 철저하게 박정희의 유신적 통치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박정희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간수준에는 단순히 박근혜를 넘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완전한 정치적 민

3) 물론 6월항쟁을 이어졌던 7,8월 노동자대투쟁과 연결시켜 하나로 파악한다면 그 원인은 훨씬 복잡해진다. 그러나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하나의 투쟁으로 연결시켜 파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노동자대투쟁에 대해서는 노중기 1997).

주화’(87년 헌정체제<sup>4)</sup>)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이트 정도는 아니지만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 등도 아들들이 연루된 김현철가이트, 김홍업홍걸가이트 등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가 보여주듯이,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권위있는 프리덤하우스 평가에 의하면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진전했으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느리지만 전진해온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2등급으로 후퇴했다. 아니 87년 6월항쟁이 30년이 다 지나도록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우리를 옥죄어왔다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	노무현(2), 이명박근혜	박근혜
	1980	1987	1988-2003	2004-2013	2014-16
정치적 자유	5	4	2	1	2
시민 권리	6	4	2	2	2
평균	5.5	4	2	1.5	2

출처: www.freedomhouse.org, 손호철 2017, 41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표층적 원인(박정희체제), 중간수준의 원인(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안정한 민주화)에 관한 한, 11월시민혁명은 6월항쟁과 관련이 있다. ‘6월항쟁의 미완성’에 따른 박정희체제의 유제의 지속,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적 민주화가 결국 11월촛불혁명으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6월항쟁의 미완성’이 촛불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심층에는 단순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넘어서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전면화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체제(97년체제)에 의해 생겨난 헬조선, 흡수저 세습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아래 표(표 2)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빈부격차는 87년 민주화이후 개선되다가 97년 경제위기이후

4)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2017, 39-50 참조.

급속히 악화되어 위험수위에 이른지 오래이다. 게다가 이 같은 불평등에 정유라로 상징되는 불공정성까지 더해져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존재 자체가 특혜 그 자체로 박근혜계이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조롱처럼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인, 아니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인 헬조선에 대한 분노이다. 평생 노력해 보아야 개인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97년 전에는 5.3%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62.2%로 12배나 높아졌다(연합뉴스 2016.12.12)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세계지도자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국제기구 옥스팜의 총재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적인 양극화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촛불시위는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경제적 사건"이라고 논평했다(중앙일보 2017. 2.1).

〈표 2〉 한국의 양극화추세

	군사독재	민주화 (노태우, YS 시기)				민주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1) (DJ, 노무현 시기)				민주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2) (이명박) (박근혜)	
	(80-86년 평균)	87	93	97	평균	98	99	07	평균	평균	(13-14년)
도시 근로자	.310	.306	.281	.291	.291	.316	.320	.324	.315	.316	.308
전 가구 (국제기준)			.298			.358	.344	.346		.341	.330

출처: 손호철 2017, 54

이해를 돕기 위해, 투쟁의 배경내지 원인이라는 면에서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을 비교한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원인 비교

	6월항쟁	11월촛불혁명
원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표층-박근혜계이트(박정희체제) 중간-계왕적 대통령제와 불안정한 정치민주화(87년 헌정체제) 심층-헬조선에 대한 분노(97년 신자유주의 체제)

## 나. 전개과정

그러면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특히 누가 주체였으며, 규모는 어떠했고, 투쟁방식과 목표는 어떠했는가?

### 1) 주체와 규모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참가규모의 비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이번 촛불과 달리 6월항쟁의 경우 참가인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당시의 산출방식과 이번의 산출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번 촛불혁명의 경우 2016년 12월 3일 제 6차 촛불에 최고인원인 232만명이 참가했으며 2016년 10월 19일 제 1차 촛불로부터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후 열린 제 21차 촛불집회까지 다섯 달 동안 연인원 1,684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에 30년 전의 항쟁은 그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최대참가규모에 대해 이를 주도한 지도부는 1987년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13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주요저서를 쓴 역사학자는 이 같은 숫자가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서중석 2011, 529-530). 『현대근현대사사전』 등은 이날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지역에서 1백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쓰고 있다. 언론들 역시 이번 촛불혁명을 과거의 운동과 비교하며 한국현대사에서 그 이전까지의 최대참가집회는 1987년 6월26일의 100만명인 것으로 상정하고 이 숫자와 이번 촛불참여인원을 비교했다. 따라서 6월항쟁의 최대참여인원은 일단 100만명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6월항쟁의 연참여인원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한 시사사전은 6월항쟁이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시위에서 이한열열사의 비극적 죽음을 기화로 촉발되어 6월 10일 호헌철폐 국민대회,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으로 거쳐 군부의 항복선언인 6.29선언까지 20여일 동안 500여만명이 참여했다고 쓰고 있다(『시사상식사전』). 이 같은 자료들에 기초해 평가하는 경우,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은 최대참가인원에서 각각 100만명과 232만명, 연참가인원에서 각각 500만명과 1684만명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참가인원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1987년과 2016-17년의 인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 우리의 인구는 4,160만명 이었지만 2016년 말 우리인구는 5,140만명으로 약 25% 늘어났다. 즉 1987년의 인구는 현재의 80%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87년 참여규모를 현재와 비교하려면 25%정도 높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인구의 차이를 고려해 참가규모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 참가인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참가인원의 비율을 계산해 이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비교하면 최대집회의 경우 6월항쟁은 인구의 2.5%, 11월촛불혁명은 4.3%가 참가했다고. 연인원으로는 6월항쟁이 인구의 12%, 11월촛불혁명은 32%가 참가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6월항쟁은 인구 열 명중 한 명꼴이, 촛불혁명은 열 명중 세 명꼴이 참가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이들 시위참가자들, 시위주도자들은 누구였는가? 우선 지도부를 보자면 6월항쟁은 ‘정치사회’의 제도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민중운동단체 등이 합작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을 구성해 운동을 주도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민중운동단체들이지만 종교계와 지역운동단체 등과 민주협(민주화추진협의회), 통일민주당 등 정치권도 적극 참여했다. 11월시민혁명과 비교하기 위해 참가단체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국본 발기인이 종교계 683명, 재야단체 343명, 지역 352명, 정치인 213명 등 2191명이었다(학술단체협의회 1997, 128). 따라서 당시의 참가단체수가 공식적인 단체만 230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촛불항쟁보다 훨씬 적었다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번 촛불혁명의 경우 민주노총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단체’들과 세월호 4.16연대, 참여연대 등 (뉴라이트계열의 냉전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무려 2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을 구성해 퇴진투쟁을 주도했다. 이 같이 87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30년간 우리의 시민사회가 그만큼 많이 성장하고 조직화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폭 확대된 것 이외에 이번 투쟁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그 지도부에 정치권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6월항쟁

은 야당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11월 촛불의 경우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의 경우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자유주의적 야당들의 경우 일부는 거리를 두는 등 그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일반참가자들은 누구인가? 참가주체라는 면에서 중요한 특징은 87년의 경우 학생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번 촛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고, 중고등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우리는 학생운동이 한국현대사에서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고 이를 일제하 광주학생운동 등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정국에서 학생운동이 전혀 중심적 역할을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해방정국의 중심세력은 학생들이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이었다(Cumings 1981 등 참조).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현대사, 정확히 이야기해 5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전쟁 등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노동자, 농민 등 ‘계급운동’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역사적 전통 때문이 아니다. 또 87년 민주화이후 계급운동, 시민운동들이 성장하면서 학생운동은 ‘주변적 운동’으로 밀려난 것이다.

둘째, 이번 촛불의 주체는 학생도 조직화된 세력도 아니고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퇴진행동의 한 지도자의 포현을 빌리면 “자유롭지만 위태로운”)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었다. 물론 퇴진행동 소속단체들의 많은 조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이었다. 퇴진행동 관계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가자중 퇴진행동소속 단체 소속원들은 10% 정도이고 90%는 일반시민이라는 것이다(손호철 2017, 114). 그렇다고 87년의 경우 시민들이 주요한 주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벡타이부대 등 일반시민들도 항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이에 대해 ‘중산층’이 주도한 것인가, 아니면 ‘민중’이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다(학술단체협의회 1997, 107-182). 그러나 민중은 단순히 노동자, 농민, 빈민 같은

5) 어떤 조직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언제 광장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위태로운’.

‘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이분법이다. 그리고 서울 도심의 경우 근무지가 도심이라는 점을 이용해 점심시간 등에 벵타이부대가 다수 참여해 ‘벵타이부대의 신화’가 생겨났지만 공단지역과 퇴근시간이후에는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육체노동자)들도 다수 참여했다(서중석 2011, 619-626). 따라서 중산층주도설이나, 벵타이부대 신화는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87년에 비해 이번 촛불의 경우 연령층, 직업군, 성별 모든 면에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여성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으며 청소년과 노인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났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참가자 조사(이지호 2017; 서복경, 이현우, 이지호 2017)에 따르면 전체참여자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고 주부도 근 20%를 차지했다. 연령도 60대 이상이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할만한 87년 항쟁 참여자들의 분포는 알 수 없지만, 여성과 노인들의 비중이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87년과 2017년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촛불시민들이 87년 참여시민들보다 ‘집단지성’으로 무장되고 훨씬 발전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7년의 경우 군사독재에 저항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용기’는 87년이 이번 보다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6월항쟁의 경우 6월 26일 하루만 해도 368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 주제, 규모 비교

	6월항쟁(1987년)	11월시민혁명(2016-17년)
인구	4,160만명	5,140만명
지속시간	20여일	5개월(실제 촛불집회일 20여일)
최대참가인원	100만명(?)(인구 2.5%)	232만명(인구 4.3%)
참가연인원	500여만명(인구 12%)	1,588만명(인구 32%)
주도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국본)-야당참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야당불참
중심세력	학생, 시민(벵타이부대, 노동자 등)	일반시민(범위 확대)(여성, 노인, 중고생 등)
정치사회	야당 적극참여	진보정당-적극 참여, 보수야당-양면적

## 2) 목표와 투쟁방식

그러면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은 투쟁목표와 투쟁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가) 목표

6월항쟁의 목표는 단순했다. 즉 대통령직선제의 쟁취였다. 나아가 이 같은 민주헌법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물론 국본 출범선언문은 단순한 직선제쟁취를 넘어서 “집시법, 언기법,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노동법 등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 범국민운동을 실천한다”고 선언했다.<sup>6)</sup> 그러나 이를 대중집회, 유인물, 구호 등에 활용되지 못했다(서중석 2011, 640). 당시 많이 사용했던 “민주헌법 쟁취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서중석 2011, 285)는 구호가 6월항쟁의 목표를 가장 잘 집약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촛불투쟁도 어찌 보면 그 목표가 단순하다. 그것은 촛불투쟁을 주도한 조직의 명칭이 잘 보여주듯이, ‘박근혜 퇴진’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은 단순한 박근혜의 물리적 퇴진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퇴진행동역시 박근혜의 물리적 퇴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적폐의 청산을 투쟁목표로 내걸었고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사망사건 특검, 성과퇴출제 폐지, 국정교과서 퇴출, 사드배치 중단, 언론독립을 청산해야할 6대적폐로 지목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투쟁했다(손호철 2017, 71).

나아가 이번 촛불은 사회혁명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변혁은 아니더라도 헬조선을 벗어나려는 투쟁이기도 했다. “내 안의 박근혜와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하고 사람을 돈이나 자신들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보는 세상”, “어쩔 수 없이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진주 집회에서의 10대청소년의 발언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식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 등이(손호

6) 언기법은 언론통제를 위한 언론기본법의 약자.

철 2017, 97)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6월항쟁과 달리 이번 촛불은 촛불혁명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아래 논의 참조).

#### 나) 투쟁방식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은 ‘시민’들이, ‘대중’이, ‘민중’이 ‘제도정치’ 내에서의 투쟁방식(‘최소주의적 방식’)을 넘어서 거리로 달려 나와 소위 ‘최대주의적 투쟁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sup>7)</sup> 이와 관련, 주류학계에서는 87년 6월항쟁의 성공을 80년 봄의 실패와 비교하며 80년의 경우 거리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최대주의자)들과 제도 내 투쟁을 주장하는 온건파(최소주의자)로 분열되었던 반면에 87년 6월항쟁의 경우 직선제개헌이라는 ‘최소주의’에 기초한 최대연합이 성공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임혁백 1990). 그러나 이는 우리의 항쟁사를 최소주의로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실패한 민주화투쟁이었던 80년 봄의 민주화운동진영의 목표는 최대주의가 아니라 계엄령철폐, 민주정부수립과 같은 최소주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87년과 차이가 없다. 다만 투쟁방식을 놓고 분열한 것이었다. 반면에 87년 항쟁은 최소주의가 아니라 최대주의적으로 단결해 모두 거리로 나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손호철 2011, 514-515). 이번 촛불혁명도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싸우는 최대주의적 방식으로 투쟁했다.

그러나 87년과 촛불은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철저하게 비폭력적 투쟁방식을 고수한 반면 6월항쟁은 그렇지 않았다. 6월항쟁에서 시민들은 나름대로 방어적 ‘대항폭력’을 행사했다. 투석전은 일상적이었고, 파출소점거, 경찰버스 방화, 경찰서 방화, 보도용 차량 방화, 방송국 화염병 투척 등으로 파출소장이 중화상을 입는가 하면(서중석 2011, 371) 버스로 경찰을 공격해 전경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서중석 2011, 424). 6월 26일 하루 동안에만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가 파괴내지 방화되어 3467명 연행됐다(『한국근현대사 사전』). 특히

7) ‘시민’, ‘대중’, ‘민중’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한 1998과 최장집 2009 참조.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시민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비폭력을 외쳤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비폭력 거부하고 대항폭력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서중석 2011, 616).

이번 촛불의 경우 1987년과 달랐다. 일부 시위참여자들이 돌출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오히려 시민들이 이들을 강하게 규율했고 철저하게 비폭력을 고수했다. 두 투쟁의 이 같은 투쟁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대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6월항쟁의 경우 전두환정부가 항쟁에 대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이를 진압하려 하면서 시민들도 이에 대해 최소한의 자구적인 대항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촛불의 경우 경찰과 정부가 촛불투쟁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응하면서 촛불투쟁역시 과격한 폭력적 방식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학의 민주화연구에서 흔히들 반대운동이 제도정치가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을 ‘최대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80년 봄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나 87년의 6월항쟁, 이번의 촛불혁명은 모두 제도정치를 넘어 거리로 나왔다는 점에서 ‘최대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운동의 진정한 ‘최대주의’는 게릴라전이나 80년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무장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도정치를 넘어서는 투쟁방식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최대주의를 세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촛불혁명과 같은 비폭력 거리투쟁, 6월항쟁과 같은 대항폭력 거리투쟁, 80년 광주와 같은 무장투쟁과 같은 세부적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촛불과 같은 비폭력 거리투쟁은 투쟁방식에 있어서 ‘최대주의’가 아니라 ‘중도주의’이다.

투쟁목표와 투쟁방식이라는 면에서 위에서 비교한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의 특징, 나아가 또 다른 한국현대사의 주요 항쟁들인 5.18민중항쟁과 4.19학생혁명의 특징을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주요항쟁 투쟁목표, 방식

투쟁방식 목표	최소주의 (제도정치내의 투쟁)	최대주의 1 (평화적 거리투쟁)	최대주의 2 (대항폭력적 거리투쟁)	최대주의3 (대항폭력적 무장투쟁)
최소주의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			(경찰-폭력) 6월항쟁 (직선제+ 민주정부수립)	(군-폭력) 5.18민중항쟁 (계엄철폐+ 민주정부수립)
중간수준 (최소주의+일정한 사회개혁)		(경찰-비폭력) 11월시민혁명 (박근혜퇴진 +적폐청산 +탈핵조선)	(경찰-폭력) 4.19학생혁명 (이승만퇴진 +민주정부수립 +진보변혁)	
최대주의 (근본적인 사회변혁)				사회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항쟁의 경과라는 면에서 하나 더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가 둘 있다. 첫째, 이번 촛불혁명과정에서 터져 나온 ‘보수시민’들의 탄핵반대시위 문제이다. 물론 6월항쟁 당시에도 87년 4월 전두환이 발표한 4.13호헌선언(직선제 개헌요구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전경련, 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들이 지지선언을 했다(이 점에서 6월항쟁을 억압적인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그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경련, 한국노총은 ‘시민사회’가 아니고 ‘국가’인가?<sup>8)</sup>). 그러나 6월항쟁 당시 직선제개헌투쟁에 대항해 직선제 개헌에 찬성하는 ‘보수시민’들의 시위는 없었다.

그만큼 지난 30년 동안 뉴라이트의 등장 등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화했다는 이야기, 특히 ‘냉전적 보수세력’이 조직화했다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냉전적 보수세력은 분단체제 확립이후 반공체제에 기생해 조직화할 필요가 없었지만 김대중정부 출범 후 위기의식에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의 시민사회도 진보(민주노총 등), 자유주의(시민단체), (냉전적) 보수(뉴라이트)

8)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2011, 58-61 참조.

의 3분 구도가 완성되었다(손호철 2011, 129-133 & 772-773) 그러나 탄핵반대시위는 단순히 이 같은 시민사회의 변화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는 이념과는 무관한 부패범죄의 문제를 자신들이 살기 위해 “보수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좌파빨갱이들의 음모”로 몰고 간 ‘수구엘리트’들의 망국적인 선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항쟁의 ‘성장전화’라는 문제이다. 6월항쟁은 이어서 7·8월 노동자대파업이라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대투쟁’으로 ‘성장전화’했다. 6.29 선언에 의해 군사정부가 민주화요구에 항복선언을 하자 그동안 억눌려있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 같은 7.8월 노동자대투쟁과 6월항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노중기 1997). 노중기는 이에 대해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의 병영적 노동현장에 대한 민주화요구가 핵심이었으며, 이 점에서 6월항쟁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였던 민주화투쟁”, 즉 “노동자대중이 수행한 또 다른 6월항쟁”(노중기 1997, 21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번 촛불혁명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별도의 노동자대투쟁이 뒤따르지 않았다. 87년 6월항쟁의 경우 민주노총과 같은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개별적 ‘시민’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의 성공으로 민주적 공간이 생겨나자 자연발생적으로 사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겨났고 그와같은 투쟁들이 모여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구성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노협이 생겨났고 전노협이 다시 민주노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번 촛불혁명의 경우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퇴진행동에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6대과제로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성과퇴출제를 포함시키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투쟁 속에 녹아냈다. 그 같은 결과로, 6월 항쟁과 달리 촛불혁명의 경우 7.8월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노동자투쟁이 뒤따르지 않았다.

## 다.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항쟁의 성과내지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라는 면에서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역사적인 이번 촛불혁명의 지휘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박근혜퇴진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퇴진행동 핵심관계자의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퇴진행동의 공동대변인역할을 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총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촛불혁명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4.19혁명은 핏빛혁명이자 미완의 시위”였고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승리였지만” “200명이 학살당하고...7년간 패배”였으며, “6월항쟁은 노태우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죽 써서 개 준 꼴”이라면 이번 혁명은 “비폭력으로 탄핵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역사상 유례없는 완성된 혁명”이라는 것이다(뉴시스, 2017/5/21.). 이 같은 평가는 박근혜퇴진을 이끌어낸 핵심실무자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로서 나의 평가는 이와 조금 다르다.

이 평가는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비교라는 이 글의 주제를 넘어서 4.19학생혁명과 5.18민중항쟁의 비교로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이기애 안총장의 문제제기를 따라가 이 넷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안총장은 4.19과 이번 촛불을 혁명으로 보고 있고 5.18과 6월항쟁을 혁명이 아니라 항쟁내지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는 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항쟁’과 ‘혁명’의 차이이다. 즉 단순한 항쟁과 구별되는 혁명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이다. 즉 “짧은 시간에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른다(Skocpol 1979).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혁명’은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사회혁명’은 단순한 정치혁명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혁명은 항쟁을 좀 더 ‘폼 나게 보이고’ 더 많은 의미가 갖게 만들기 위한 레토릭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직선제 개헌과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했던 6월항쟁이나 유신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5.18민중항쟁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특히 5.18은 4.19를 넘어서 무장투쟁이라는 훨씬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19과 달리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반면 4.19는 단순히 이승만의 퇴진을 넘어서 (이승만 퇴진 이후) 한국전쟁

학살자 명예회복, 남북 평화통일운동, 민주노조운동 등 빠르게 급진화되어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사월혁명연구소편 1990). 물론 이 같은 투쟁은 5.16쿠데타에 의해 좌초함으로써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번 촛불을 단순히 퇴진행동의 명칭처럼 단순히 박근혜퇴진 투쟁으로 보고 박근혜퇴진으로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즉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이번 투쟁은 6월항쟁, 5.18항쟁처럼 단순한 ‘항쟁’(‘11월촛불항쟁’)이지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의 원인에는 박정희정부가 상징되는 우리의 ‘고장난 대의민주주의’, 나아가 헬조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참가자들은 공개발언을 통해 이들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개인적으로 이번 촛불을 촛불항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부른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퇴진행동 스스로 이번 투쟁의 목표중의 하나를 적폐청산으로 보고 사드배치 철회 등 6대 적폐 청산을 주요과제로 내걸고 투쟁했다. 이는 퇴진행동도 이번 촛불의 목표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의 탄핵으로 상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번 촛불이 한국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혁명”내지 ‘완성된 항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촛불의 목표를 단순히 박근혜퇴진으로 좁게 보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완성된 것,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면, 6월항쟁역시 그 일차적인 목표인 직선제개헌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완성된 것, 성공한 것이다.

이번 촛불을, 나아가 지나간 주요 항쟁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최소한 세 수준에서는 분석해야 한다. 하나는 직선제 개헌, 박근혜퇴진과 같이 좁은 ‘1차 목표’들이다. 두 번째는 민주정부수립, 적폐청산 같이, 이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2차 목표’들이다. 세 번째는 진보적인 사회변혁, 탈헬조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라는 ‘근본적 목표’이다. 바로 이 세 번째 목표가 ‘항쟁’과 ‘혁명’을 구별하는 분기점일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5.18은 1차적 목표에서부터 패배했다. 다만 증장기적으로는 민주화와 한국전쟁이후 사라진 ‘진보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다. 6월항쟁은 첫 번째 수준(1차 목표)에서는 성공했지만 양김의 분열로 군부통치종

식과 민주정부수립이라는 두 번째 목표(2차 목표)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계도 많았다. 4.19학생혁명은 단순한 이승만 타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그 점에서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타도’라는 1차 목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2차 목표는 성공하지만 마지막 목표인 진보적 변혁은 5.16에 의해 실패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 이번 촛불은 어떠한가? 우선 박근혜탄핵이란 1차 목표는 달성됐다. 그리고 2차 목표와 관련해 6월항쟁과 달리 정권교체와 ‘자유주의’ 정부(흔히들 ‘민주정부’라고 부르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되는 ‘민주정부’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고 ‘보수정부’와 대비되는 ‘자유주의정부’가 맞는 표현이다) 수립에는 성공했지만, 적폐청산과 대의민주주의의 발본적인 개혁은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고 취임하자마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반발, 국제정치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 등 6대 적폐 청산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촛불을 항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완의 (현재진행형) 항쟁’이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촛불을 단순한 ‘촛불항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는 헬조선의 탈피는 더더욱 미지수이다. 사실 새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계속하는 한 헬조선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근혜계이트로 수그러들었던 박정희신화는 다시 살아나고 ‘제 2의 박근혜’가, 한국판 트럼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손호철 2017, 121). 이 점에서 11월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현재진행형의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탈헬조선과 같은, 박근혜퇴진과 적폐청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번 촛불의 기제 깔려 있고 이에 대한 요구가 집회발언에서 여러 번 나타났지만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요구였느냐는 문제이다. 이는 항쟁과정에 대한 보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더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둘째, 혁명을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미완의 혁명’, ‘실패한 혁명’이라는 개념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혁명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결과 비교

	‘항쟁’		‘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4.19학생혁명	11월촛불혁명
1차 목표	X(계엄철폐)	O(직선제개헌)	O(이승만 퇴진)	O(박근혜 퇴진)
2차 목표	X(민주정부수립)	X(군부통치종식, 민주정부수립)	O(민주정부수립)	O(민주정부수립) ?(적폐청산)
근본목표			X(진보적 변혁) -미완의 혁명	?(탈헬조선) -현재진행형
장기적 결과	민주화, 진보의 부활	민주화(OX)	민주화	

### 3. 나오며

마르크스의 글 중에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헤겔은 어디에선가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은 두 번 반복한다고 썼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어버렸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한다”(Marx 1979, 103). 그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비극이었다면 박근혜는 희극이다. 나아가 박정희를 무너트린 부마항쟁은 양김의 분열속에서 12.12쿠데타와 5.18학살을 통해 비극으로 끝이 났다. 또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이어받은 제 5공화국과 군사독재는 6월항쟁에 의해 끝장났지만 그 결과는 또 다시 양김의 분열 속에서 노태우의 승리라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마르크스의 정식이 맞다면 박근혜를 무너트린 11월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서도, 4.19학생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과 같이 비극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11월시민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11월시민혁명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6월항쟁과 달리 ‘민주정부’ 수립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4.19학생혁명도 ‘민주정부’ 수립까지는 성공했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이번 촛불혁명의 진정한 성패는 지금부터에 달려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직 촛불을, 최소한 가슴 속의 촛불은 끌 수가 없다. 촛불이여, 영원하라!

## 참고문헌

- 김 원. 2009. 『87년 6월항쟁』. 책세상
- 김정한. 1998. 『대중과 폭력』. 이후
- 노중기. 1997.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학술단체협의회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 사월혁명연구소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 서복경, 이현우, 이지호. 2017. 『탄핵광장의 안과 밖』. 책담
- 서중석. 2011. 『6월항쟁』. 돌베개
- 손호철. 2011.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이매진
- 손호철. 2016. “광화문항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6. 11. 16
- 손호철. 2017.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강대 출판부
- 이지호. 2017. “‘박근혜 촛불’, 누가 왜 참여했나?”.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 1
-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 돌베개
- 학술단체협의회편.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 한홍구. 2014. 『유신』. 한겨레출판
- Braudel, Fernando. 1972. “History and Social Science: the longue duree”. in P. Burke et al. eds. *Economy and Society in Modern Europe*. Routledge
-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rinceton Univ. Press
- Marx, Karl. 1979.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Collected Works Vol. 11*. International Publishers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ambridge Univ. Press
- 연합뉴스 2016.12.12.
- 중앙일보 2017. 2.1

# The June Uprising and the November Candle Revolution in Korea -Repetition and Difference-

Sonn, Ho chul | Sogang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and the November Candle Revolution in 2016-2017 in terms of the causes, the subjects, the scales, the methods, the goals, and the consequences. After comparing these two historical events with two other important democratic movements in Korea,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and the May 18<sup>th</sup> Gwangju Uprising, the paper argues that contrary to the June Uprisings, the November Candle Revolution should be classified not as an uprising but as a revolution, to put it more precisely, an ‘ongoing unfinished revolution’.

---

**Key Words** | June Uprisings, November Candle Revolution, April Student Revolution, May 18 Gwangju Uprisings